

# CONTENTS

교재의 사용법	008P
기출문제 풀이 Part 1	017P
기출문제 풀이 Part 2	113P

## 지문 목차 \_ Part 1

### Day 1 \_ 018P

[기술] 2024.11 [8~11] '정확한 데이터 처리'  
[인문] 2018.06 [16~21] '울곡의 수기치인'

### Day 2 \_ 023P

[인문] 2021.12 [16~21] '북학파와 청나라'  
[기술] 2019.09 [29~32] 'STM'

### Day 3 \_ 028P

[기술] 2025.11 [10~13] '영상 복원 확산 모델'  
[사회(경제+법)] 2017.11 [37~42] '공정한 보험과 고지 의무'

### Day 4 \_ 033P

[인문] 2020.09 [21~26] '영화와 역사 서술'  
[기술] 2023.09 [14~17] '인터넷 검색 엔진'

### Day 5 \_ 038P

[인문] 2025.09 [4~7]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예술] 2021.09 [20~25] '예술의 정의와 비평'

### Day 6 \_ 044P

[인문] 2020.11 [16~20] '베이지주의'  
[기술+예술] 2017.09 [25~30] '콘크리트와 건축 미학'

### Day 7 \_ 049P

[인문] 2019.06 [16~21] '서양 의학과 최한기의 인체관'  
[사회(사회학)] 2023.06 [14~17] '사건의 효과 평가'

### Day 8 \_ 054P

[사회(법+경제)] 2021.06 [29~33] 'ICT 산업'  
[인문] 2022.06 [4~9] '서양과 동양의 인과 관계'

### Day 9 \_ 059P

[인문] 2021.06 [16~21] '과거제의 명암'  
[기술] 2022.11 [14~17] '어라운드뷰'

### Day 10 \_ 064P

[사회(사회학)] 2024.06 [4~7]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  
[인문+과학] 2019.11 [27~32] '서양과 중국의 우주론'

### Day 11 \_ 070P

[인문+사회(법)] 2025.11 [14~17]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  
[과학+인문] 2018.09 [27~32]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

### Day 12 \_ 075P

[과학+예술] 2017.06 [28~33] '음악적 아름다움'  
[사회(사회학)] 2024.11 [4~7]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해결'

### Day 13 \_ 080P

[기술+과학] 2020.11 [26~29] '이식의 문제점'  
[인문] 2023.06 [4~9] '역사와 학문의 정치 현실 적용'

### Day 14 \_ 085P

[인문+과학] 2020.06 [37~42] '개체성'  
[인문] 2017.06 [20~24] '유비 논증'

### Day 15 \_ 090P

[과학] 2021.09 [34~37] '항미생물 화학제'  
[인문] 2025.06 [12~17]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 Day 16 \_ 095P

[인문] 2024.09 [12~17] '조선 신분제'  
[기술] 2021.12 [34~37] '3D 합성 영상'

### Day 17 \_ 100P

[인문] 2022예시 [5~10] '이원론&동일론'  
[기술] 2025.09 [8~11] '블록체인 기술'

### Day 18 \_ 104P

[과학+사회] 2023.11 [14~17]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비례 관계'  
[사회(경영학)] 2025.06 [4~7] '과두제적 경영'

### Day 19 \_ 108P

[인문] 2019.11 [39~42] '가능세계'  
[사회(법+경제)] 2024.09 [4~7]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

## 지문 목차 \_ Part 2

### Day 20 \_ 114P

[과학] 2017.11 [33~36]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이용'  
[인문] 2023.11 [4~9] '조선에서의 유서 편찬'

### Day 21 \_ 119P

[인문] 2019.09 [33~38]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기술] 2022예시 [30~34] '충전지'

### Day 22 \_ 124P

[사회(법)] 2019.11 [16~20] '법률 효과'  
[인문] 2023.09 [4~9] '아도르노의 미학'

### Day 23 \_ 129P

[사회(법+경제)] 2018.11 [27~32] '정책 수단의 선택'  
[기술] 2024.09 [8~11] '수정 진동자'

### Day 24 \_ 134P

[기술] 2022.09 [14~17] '메타버스'  
[사회(법)] 2020.09 [27~31] '점유'

### Day 25 \_ 138P

[기술] 2021.06 [25~28] '영상 안정화 기술'  
[사회(법)] 2017.09 [35~39] '법인격 부인론'

### Day 26 \_ 142P

[기술] 2022.06 [14~17] 'PCR'  
[인문] 2018.09 [38~42] '집합 의례'

### Day 27 \_ 146P

[인문] 2018.11 [16~19]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사회(경제+법)] 2020.11 [37~42] '말랑말랑한 법(soft law)'

### Day 28 \_ 151P

[예술] 2022예시 [16~21] '음악의 기능과 아름다움'  
[기술] 2019.06 [35~38] 'LFIA 키트'

### Day 29 \_ 156P

[사회(법)] 2019.06 [22~26] '사법'  
[사회(경제)] 2018.06 [22~25] '통화 정책'

### Day 30 \_ 160P

[사회(법)] 2023.11 [10~13] '법조문에서의 불확정 개념'  
[기술] 2018.06 [30~34] 'DNS 스푸핑'

### Day 31 \_ 164P

[과학] 2025.06 [8~11] '플라스틱의 형성 원리'  
[인문] 2022.09 [10~13] '반자유주의 논증 비판'

### Day 32 \_ 168P

[인문] 2022.06 [10~13] '베카리아의 형벌론'  
[기술] 2017.06 [16~19] '인공 신경망 기술'

### Day 33 \_ 172P

[사회(경제)] 2019.09 [21~25] 'CDS 프리미엄'  
[인문] 2024.11 [12~17] '노자의 도에 대한 해석'

### Day 34 \_ 177P

[인문] 2025.11 [4~9] '동양에서의 서양 문물 수용'  
[사회(법)] 2021.09 [26~30] '행정입법'

### Day 35 \_ 182P

[기술] 2020.09 [38~41] '스마트폰의 위치 찾기'  
[사회(법)] 2023.09 [10~13] '유류분권에 의한 무상 처분 재산 반환'

### Day 36 \_ 186P

[기술] 2024.06 [8~11] '고체 촉매의 활성화'  
[인문] 2022.11 [4~9] '변증법 모델로 본 예술의 상대적 위상'

### Day 37 \_ 191P

[사회(경제)] 2022.09 [4~9] '광고의 경제적 효과'  
[인문] 2017.11 [16~20] '콰인의 총체주의'

### Day 38 \_ 196P

[사회(경제)] 2020.06 [27~31] '금융과 경제 안정'  
[과학] 2017.09 [31~34] '열기관의 열효율'

### Day 39 \_ 200P

[과학] 2023.06 [10~13] '비타민 K의 역할'  
[인문] 2024.06 [12~17] '의식과 지각'

### Day 40 \_ 205P

[인문] 2025.09 [12~17] '영화 이론'  
[기술] 2018.11 [38~42] '부호화'

### Day 41 \_ 210P

[예술] 2018.09 [16~19] '하이퍼리얼리즘'  
[사회(법)] 2021.12 [26~30] '예약'

### Day 42 \_ 214P

[인문] 2020.06 [19~22] '에피쿠로스'  
[사회(경제)] 2022.11 [10~13]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 연도별 기준 목차

이 교재의 구성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연도별 기준 목차'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 제시된 순서대로 푸시면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기술] 2017.06 [16~19] '인공 신경망 기술'	170P
[인문] 2017.06 [20~24] '유비 논증'	088P
[과학+예술] 2017.06 [28~33] '음악적 아름다움'	075P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기술+예술] 2017.09 [25~30] '콘크리트와 건축 미학'	046P
[과학] 2017.09 [31~34] '열기관과 열효율'	198P
[사회(법)] 2017.09 [35~39] '법인격 부인론'	140P

## 2017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2점>

[인문] 2017.11 [16~20] '과인의 총체주의'	194P
[과학] 2017.11 [33~36]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이용'	114P
[사회(경제+법)] 2017.11 [37~42] '공정한 보험과 고지 의무'	030P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89점>

[인문] 2018.06 [16~21] '율곡의 수기치인'	020P
[사회(경제)] 2018.06 [22~25] '통화 정책'	158P
[기술] 2018.06 [30~34] 'DNS 스푸핑'	162P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3점>

[예술] 2018.09 [16~19] '하이퍼리얼리즘'	210P
[과학+인문] 2018.09 [27~32]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	072P
[인문] 2018.09 [38~42] '집합 의례'	144P

## 2018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4점>

[인문] 2018.11 [16~19]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146P
[사회(법+경제)] 2018.11 [27~32] '정책 수단의 선택'	129P
[기술] 2018.11 [38~42] '부호화'	208P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1점>

[인문] 2019.06 [16~21] '서양 의학과 최한기의 인체관'	049P
[사회(법)] 2019.06 [22~26] '사법'	156P
[기술] 2019.06 [35~38] 'LFIA 키트'	154P

##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7점>

[사회(경제)] 2019.09 [21~25] 'CDS 프리미엄'	172P
[기술] 2019.09 [29~32] 'STM'	026P
[인문] 2019.09 [33~38]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119P

## 2019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84점>

[사회(법)] 2019.11 [16~20] '법률 효과'	124P
[인문+과학] 2019.11 [27~32] '서양과 중국의 우주론'	066P
[인문] 2019.11 [39~42] '가능세계'	108P

##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87점>

[인문] 2020.06 [19~22] '에피쿠로스'	214P
[사회(경제)] 2020.06 [27~31] '금융과 경제 안정'	196P
[인문+과학] 2020.06 [37~42] '개체성'	085P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인문] 2020.09 [21~26] '영화와 역사 서술'	033P
[사회(법)] 2020.09 [27~31] '점유'	136P
[기술] 2020.09 [38~41] '스마트폰의 위치 찾기'	182P

## 2020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1점>

[인문] 2020.11 [16~20] '베이즈주의'	044P
[기술+과학] 2020.11 [26~29] '이식의 문제점'	080P
[사회(경제+법)] 2020.11 [37~42] '말랑말랑한 법(soft law)'	148P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2점>

[인문] 2021.06 [16~21] '과거제의 명암'	059P
[기술] 2021.06 [25~28] '영상 안정화 기술'	138P
[사회(법+경제)] 2021.06 [29~33] 'ICT 산업'	054P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예술] 2021.09 [20~25] '예술의 정의와 비평'	040P
[사회(법)] 2021.09 [26~30] '행정입법'	180P
[과학] 2021.09 [34~37] '항미생물 화학제'	090P

## 2021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88점>

[인문] 2021.12 [16~21] '북학파와 청나라'	023P
[사회(법)] 2021.12 [26~30] '예약'	212P
[기술] 2021.12 [34~37] '3D 합성 영상'	098P

#### 2022학년도 예시문항 <1등급 커트라인 85점 내외(예상)>

[인문] 2022예시 [5~10] '이원론&동일론'	100P
[예술] 2022예시 [16~21] '음악의 기능과 아름다움'	151P
[기술] 2022예시 [30~34] '충전지'	122P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화작 88~91 / 언매 83~86>

[인문] 2022.06 [4~9] '서양과 동양의 인과 관계'	056P
[인문] 2022.06 [10~13] '베카리아의 형벌론'	168P
[기술] 2022.06 [14~17] 'PCR'	142P

####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화작 100 / 언매 96>

[사회(경제)] 2022.09 [4~9] '광고의 경제적 효과'	191P
[인문] 2022.09 [10~13] '반자유의지 논증 비판'	166P
[기술] 2022.09 [14~17] '메타버스'	134P

#### 2022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화작 82~86 / 언매 81~85>

[인문] 2022.11 [4~9] '변증법 모델로 본 예술의 상대적 위상'	188P
[사회(경제)] 2022.11 [10~13]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216P
[기술] 2022.11 [14~17] '어라운드뷰'	062P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화작 83~88 / 언매 81~84>

[인문] 2023.06 [4~9] '역사와 학문의 정치 현실 적용'	082P
[과학] 2023.06 [10~13] '비타민 K의 역할'	200P
[사회(사회학)] 2023.06 [14~17] '사건의 효과 평가'	052P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화작 91~94 / 언매 87~88>

[인문] 2023.09 [4~9] '아도르노의 미학'	126P
[사회(법)] 2023.09 [10~13] '유류분권에 의한 무상 처분 재산 반환'	184P
[기술] 2023.09 [14~17] '인터넷 검색 엔진'	036P

#### 2023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화작 95~96 / 언매 91>

[인문] 2023.11 [4~9] '조선에서의 유서 편찬'	116P
[사회(법)] 2023.11 [10~13] '법조문에서의 불확정 개념'	160P
[과학+사회] 2023.11 [14~17]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비례 관계'	104P

####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화작 97~98 / 언매 93~94>

[사회(사회학)] 2024.06 [4~7]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	064P
[기술] 2024.06 [8~11] '고체 촉매의 활성화'	186P
[인문] 2024.06 [12~17] '의식과 지각'	202P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화작 89~92 / 언매 85~88>

[사회(법+경제)] 2024.09 [4~7]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	110P
[기술] 2024.09 [8~11] '수정 진동자'	132P
[인문] 2024.09 [12~17] '조선 신분제'	095P

#### 2024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화작 86~88 / 언매 83~85>

[사회(사회학)] 2024.11 [4~7]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해결'	078P
[기술] 2024.11 [8~11] '정확한 데이터 처리'	018P
[인문] 2024.11 [12~17] '노자의 도에 대한 해석'	174P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화작 83~87 / 언매 82~85>

[사회(경영학)] 2025.06 [4~7] '과두제적 경영'	106P
[과학] 2025.06 [8~11] '플라스틱의 형성 원리'	164P
[인문] 2025.06 [12~17]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092P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화작 100 / 언매 97~98>

[사회(법)] 2025.09 [4~7]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038P
[기술] 2025.09 [8~11] '블록체인 기술'	102P
[인문] 2025.09 [12~17] '영화 이론'	205P

#### 2025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화작 93~95 / 언매 90~92>

[인문] 2025.11 [4~9] '동양에서의 서양 문물 수용'	177P
[기술] 2025.11 [10~13] '영상 복원 확산 모델'	028P
[인문+사회(법)] 2025.11 [14~17]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	070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4.11 [8~11]

(해설편 Part 1 p.010)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 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 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 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 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 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 02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03** ㉔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 을 찾는 B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 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 ①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 ②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 ③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 ④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 ⑤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0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형성(形成)하기
- ② ㉡: 누락(漏落)되어
- ③ ㉢: 도래(到來)한다
- ④ ㉣: 투과(透過)하는
- ⑤ ㉤: 소원(疏遠)하여

(해설편 Part 1 p.017)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 0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 06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07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 08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09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

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 자극 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 성행 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

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12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 13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14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15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 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 1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드러난
- ② ㉡ : 생각하지
- ③ ㉢ : 그치지
- ④ ㉣ : 따라갔다
- ⑤ ㉤ : 일어났다



(해설편 Part 1 p.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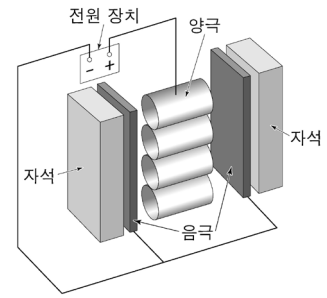
㉠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 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STM은 대체로 진공 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진공 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 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가령 질소의 경우 20℃,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 \times 10^{-9}$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9}$ 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 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 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스퍼터 이온 펌프

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높여 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다.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라 부른다. 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 토르(torr) : 기체 압력의 단위.

##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 ②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 ③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
- ④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 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에 반비례한다.
- 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1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없다.
- ②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 ③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 ④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단 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 ⑤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19 ㉡의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 ②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 ③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 ④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 ⑤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한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 통 A~E가 있고, 각 진공 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진공 통 A 안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이며, 모든 진공 통의 내부 온도는  $20^{\circ}\text{C}$ 이다.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 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이다.)

진공 통	기체	분자의 질량 (amu*)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 (개/cm <sup>3</sup> )
A	질소	28	4N
B	질소	28	2N
C	질소	28	7N
D	산소	32	N
E	이산화 탄소	44	N

\* amu : 원자 질량 단위.

- ①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
- ②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보다 낮겠군.
- ③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 ④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 ⑤ E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 하이라이트 문장

④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공정한 보험’을 제대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말들을 개념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납득’하는 것이예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식의 무책임한 독해를 하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단죄를 받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7번 문장의 내용까지 하나의 이야기 (‘보험료 총액=보험금 총액’이어야 공정하다.)로 정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문단

①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③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④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⑥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⑦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 ① #화제의 흐름

현실에서는 이런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 산정은 위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공정한 보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식인 것이죠!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 ②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 제시

그런데 슬슬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보험사는 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정한 보험’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만 하다가 ‘현실적으로’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네요. 뭔가 내용이 살짝 달라졌다는 느낌이 와야 합니다. 2문단과 카테고리를 나눠야 해요.

어쨌든,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료를 같게 해야 하는데, 가입자가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아서 ‘사고 발생 확률’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 ③ #재진술 #문제점 제시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이 같은 집단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보험사가 줘야 하는 보험금 총액이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 총액’에 비해 ‘보험금 총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공정한 보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으면 이 문장이 ‘보험료 총액≠보험금 총액’의 재진술임을 알았을 것이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문제’라는 점까지 체크할 수 있었겠죠?

### ④~⑤ #재진술 #문제점 제시

‘보험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보다 커지니까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만들어야겠죠? 누가 자신의 ‘사고 발생 확률’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사고 발생 확률’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하게 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합니다. 역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 ⑥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거네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비해 ‘자신의 위험 정도’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위험 정도’는 ‘사고 발생 확률’과 연결되는 정보겠죠?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 정도를 속이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 공동체에 ‘더 높은 수준의 위험 정도’를 갖는 가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문제는 지금까지 읽었던 말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원인’이 구체화되었을 뿐, 나머지 얘기는 다 같은 말입니다.

## ⑦ #해결책 제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한 문제점. 즉 ‘공정한 보험’을 실현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원인과 문제를 정리해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원인 때문에 ‘공정한 보험 실현 힘들’이라는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결국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고민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정보의 대칭성’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들을 한 순간, 이 지문은 아주 쉬운 지문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의 제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어떻게 정보를 ‘대칭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하이라이트 문장

②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지문의 진짜 화제를 잡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단순히 ‘공정한 보험’이 무엇인지가 지문의 핵심이 아니라, ‘공정한 보험’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진짜 화제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정보를 모아 줄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 4문단

①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②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③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④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 ① #해결책 제시 #화제의 흐름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러한 수단, 즉 해결책은 바로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였네요! ‘공정한 보험’에 생기는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까지 등장했네요. ‘공정한 보험’이라는 ‘화제’ 속에서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어쨌든 ‘고지 의무’는 말 그대로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신의 ‘위험 정도’를 보험사에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위험 정도를 ‘고지’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 ② #정의 제시

일단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고 하네요. ‘보험 계약’과 관련된 정의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청약’을 하면 보험사가 따져 보고 ‘승낙’을 하는 것이죠. 이와 ‘고지 의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며 계속 읽으면 되겠네요.

## ③~④ #해결책 제시 #재진술

이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지 의무’이자, 위에서 이야기하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되겠네요. 중요한 사항을 알려 주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 결정 여부와 차등적인 보험료 책정의 근거가 된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당연하네요. 개인의 ‘사고 발생 확률’이 너무 높으면 청약을 거절해야 ‘공정한 보험’이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고지 의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보험사는 ‘공정한 보험’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 ⑤ #재진술

그리고 이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한 것들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공정한 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네요.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하고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과 같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데, ‘고지 의무’는 이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제는 명확해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공정한 보험 실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고지 의무. 고지 의무가 해결책이니까, 그 해결책의 정의와 특징이 이 지문의 핵심이겠네요!

이렇게 읽는 것이 문단 간의 유기성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딱 하나의 화제와 구조를 중심으로 내용들이 엮이는 것이 보이죠? 굉장히

어렵더라도 이 경지에 올라야 수능 시험장에서도 어려운 지문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지문이 '공정한 보험'과 '고지 의무'라는 두 가지 화제로 읽혔다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정한 보험'을 실현시키기 위한 '고지 의무'라고 유기적으로 독해되어야 해요.

## 하이라이트 문장

①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이 문장을 읽고 우리가 앞 문단에서 잡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된 것을 바로 깨달았어야겠죠? 지문이 예상하는 대로 전개된다는 걸 느끼면서 읽어주세요.

### 5문단 (1)

①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②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③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④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 ①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지금부터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를 안 한 것이니까 당연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재진술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카테고리에서 지문을 독해하면 되겠네요.

### ②~④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에게 '계약 해지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 할 텐데 그 불이익이 바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겐 미래의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보험 해지권'은 정말로 강력해서, 보험 사고의 발생 여부와 관련 없이, 심지어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이 깨진 것이니 당연히 보험금을 줄 이유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준 것이니까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최대한 당연한 말로 납득해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납득해야만 기억에 남고, 그래야 선지 판단이 빨라져요!

### ⑤ #비교/대조

그런데 갑자기 일반적인 법과의 '비교'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에 대입해보면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라는 법을 위반하면 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달리', 보험에서는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 배상이나 의무 강제 등은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참고로 '손해 배상'과 '반환 청구'는 다른 개념이에요. '손해 배상'은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반환 청구'는 이미 준 보험금을 '반환'만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금을 돌려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든 인건비 등의 금액까지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읽고 있는 정보들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다는 사실까지 챙겨주도록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식해야 해요.

## 하이라이트 문장

②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계약 해지권'이라는 것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임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에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바탕으로 지문을 유기적으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 5문단 (2)

⑥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⑦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⑧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⑨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⑩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⑪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 ⑥ #화제의 흐름 #카테고리 나누기

그런데 무적으로 보이는 '계약 해지권'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 그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읽게 될 것이네요. 일종의 '예외'이기도 하네요. 중요한 정보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채로 읽어 봅시다.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카테고리'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 ⑦~⑨ #재진술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해지권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하네요. '보험사'가 잘못된 거니까 '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해지권이 평생 부여된다면 보험 가입자는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겠죠? 이렇게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있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 '기간'에 '제한'을 두는 거겠네요. 계속해서 '보험사'보다 '보험 가입자'를 챙겨주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지권 배제'와 '행사 기간 제한' 등을 납득 해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기억하기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아요.

### ⑩~⑪ #재진술

또, '중요한 사항'에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자'를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

긴 했지만, 당장 일어난 '사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주는 것이죠. 그래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으니까 '해지권 행사'는 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납득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읽은 이 내용이 '계약 해지권의 제한'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는 정보로 처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보량이 많아도, 우리는 그 정보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정보의 역할을 통한 카테고리화'를 통해서 말이죠!

## 하이라이트 문장

⑥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장을 읽고 나면 앞 문단에서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다룬 것과 달리, 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룬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죠? 개념은 '계약 해지권' 하나이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다르게 구현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 | 생각 심화 |

법에서는 왜 보험 가입자의 책임보다 보험사의 책임을 크게 둘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사와 같은 큰 기업과 우리와 같은 개인이 아무 핸디캡 없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법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봅시다.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무기대등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보험사의 책임이 가입자의 책임보다 큰 것입니다. '기출 소재를 통해' 여러 메커니즘을 익혀놓으면 새로운 글을 읽을 때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생각 심화'에 적어둘 테니 외우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납득하고, 이해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에 실패하게 될 거예요. 지문이 쉽더라도 기본적인 독해 태도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6문단

①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②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③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④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⑤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재진술

이번엔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게시한 상품의 ‘이용후기’를 사업자가 활용하는 광고예요. 소비자들은 ‘이용후기’를 쓰고, 사업자는 ‘광고’를 하는 구조인 것이죠.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이용후기’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광고로 적극 활용하고, 불리한 것은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역시 우리가 많이 겪어 온 내용들이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비공개·삭제는 ‘부당한 광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은 모두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죠? 합리적 이유 없이 그저 자신들의 상품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용후기’를 비공개·삭제하는 것은 일종의 ‘부당한 광고’가 된다는 것이예요.

### ④~⑤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이렇게 단순히 비공개·삭제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표시광고법’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내용이네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시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더라도,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명

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가볍게 납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면의 정보를 추론하면서 읽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해요.

## 하이라이트 문장

③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결국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에 대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4%	76%	12%

### 4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끝났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부당한 광고’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자가 조금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납득했던 차이점이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 즉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가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과 엮어서 납득했던 내용이죠?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히 사업자가 입증해야지.
해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정당성은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했죠?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데 왜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해?
해설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그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할 때의 이야기이지요. 만약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에도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비전문가의 ‘추천·보증’은 아예 금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예외였지.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 예외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겠죠. 예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보자마자 지워낼 수 있었을 거예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26%	12%	51%	5%

#### 4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 ㉡ 이용후기 광고

- 우리가 완벽히 납득하고 있는 두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납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럴 때 왜 허용해.
해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었죠? 완벽하게 납득하고 있던 내용이니 가볍게 지울 수 있겠네요.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전체,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장 경쟁 촉진이 목적인데?
해설	‘공정거래법’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이 지문의 첫 번째 화제 그 자체였죠? 나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그 자체로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미리 생각했듯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일 것이구요.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보호받지.
해설	‘이용후기 광고’ 역시 일종의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고 했어요. ‘부당한 광고’의 수준이 아니라면, 사업자는 이러한 자유를 보호받으며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소비자가 쓴 걸 사업자가 활용하는 거지.
해설	‘이용후기 광고’는 소비자가 게시한 상품의 ‘이용후기’를 사업자가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는 이러한 정의에 들어맞지 않네요. 정의만 제대로 체크했어도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 틀렸네.
해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인 것이죠. 한편, ‘이용후기 광고’는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사업자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 완전 틀린 선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4%	86%	6%	2%

#### 4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 [보기]

A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전형적인 법 지문의 <보기> 문제입니다. 제시된 사례를 지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대응시켜놓고 선지를 판단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A상품의 제조 사업자인 ‘갑’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불리한 ‘이용후기’의 삭제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 여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하고 있네요. 이것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 광고가 아니고, 이들의 추천 내용이 전문적 지식에 부합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한편, ‘을’은 A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용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추천·보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은 ‘갑’에게 불리한 내용을 잔뜩 담아 ‘이용후기’를 올린 상황이네요.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황인데, 만약 ‘병’의 ‘이용후기’가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미리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 ① 갑이 A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비공개·삭제 모두 부당한 광고의 일종이었지.
해설	‘갑’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는데, 삭제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럼 거짓 광고니까 제재받겠지.
해설	‘갑’이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거짓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되는 정당한 광고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광고'로,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였죠?

## | 생각 심화 |

‘교수팀’, ‘실험’과 같은 단어에 꽂혀 이 선지를 ‘전문적 판단’, ‘전문적 지식’과 엮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 선지에서 묻는 상황은 박OO 교수팀이 ‘전문적 지식’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실험을 한 상황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런 실험도 하지 않았으면서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상황이에요. 이때에도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는 내용의 실험을 한 것처럼 꾸밀 수는 있으니, 이 선지에서 묻는 상황의 경우에는 ‘거짓 광고’로 인한 제재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서 사고과정의 오류가 오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어려워지면 이렇게 디테일한 포인트에서 정답과 오답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당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4번 문장, 3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권장 소비자 가격도 강제성이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지.
해설	<p>‘갑’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은 ‘강제’가 아닌 ‘권장’이기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에서 제시한 상황은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가격을 ‘강제’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이고, 이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명분 없이 ‘강제’했다는 것이기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따른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p> <p>지문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제시한 ‘강제성’을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부당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말로 재진술해서 제시한 선지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고난도 선지는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선지에서 재진술시키는 형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도록 합시다.</p>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야지.
해설	‘을’은 ‘갑’의 상품을 ‘추천·보증’한 상황입니다. 이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이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어요.

## FAQ

**Q** 말씀하신 대로 ‘을’은 ‘갑’의 상품을 ‘추천·보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고 했으니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지문에서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는 건 ‘추천·보증’의 경우로 한정했으니까요.

**A** 지문에서 정의하는 ‘이용후기 광고’의 정의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예요. 즉, 이 지문에서 ‘이용후기 광고’는 사업자가 주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을’과 같은 소비자가 게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에서 ‘홈페이지’와 같이 ‘이용후기 광고’의 정의에 들어 있던 단어들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늘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⑤ 병이 A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이지요? 부정적인 내용의 ‘이용후기’라도,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